

# 보건복지 ISSUE & FOCUS

##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sup>1)</sup>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선임연구위원

-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음.
- 분석 결과, 최근 들어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은 상승 추세이나 조세와 소득보장 등을 통한 공적 개입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빈곤의 두드러진 특징은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라 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정형 근로자, 자영자, 여성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함으로써 'K자형' 양극화의 우려도 제기되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재분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01. 들어가며

#### ◆ 왜 불평등에 주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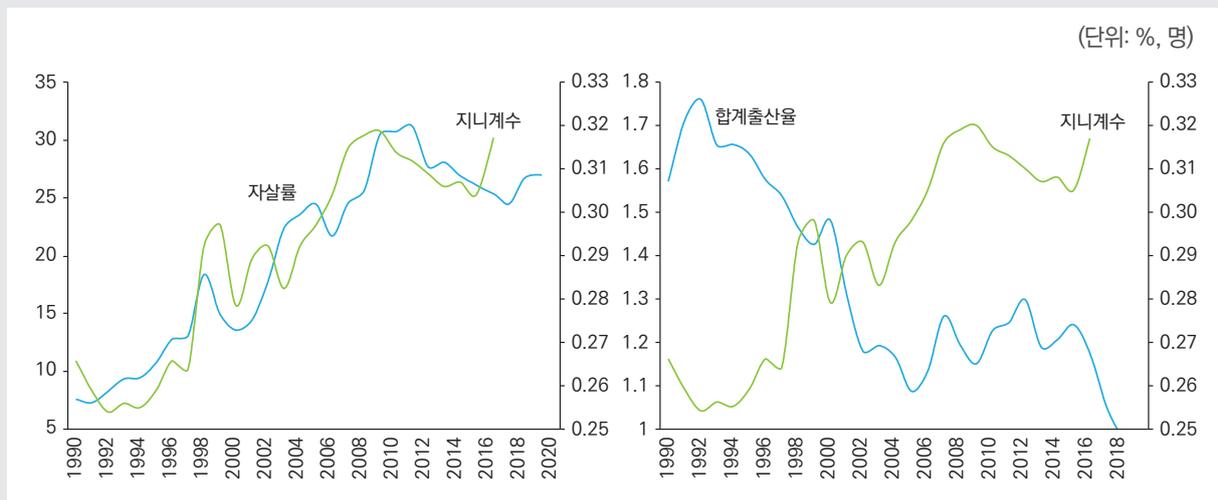
- 한국은 한편으로는 20세기 중반에 최빈국이었던 나라 중 인적 자원만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동시에 민주화를 달성한 거의 유일한 나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sup>2)</sup>이며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임.

1) 이 글은 2021년 9월 9일 개최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학술대회(포용사회와 여성노동의 미래)에서 발표한 원고("생애주기별 불평등구조를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를 발췌·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2) 세계은행(World Bank)에 제시된 2018년 기준 125개국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77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으며, 홍콩(1.072)과 싱가포르(1.140)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도시국가로 한국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1.262), 이탈리아(1.290), 그리스(1.350) 등의 남유럽 국가들로 우리나라와 함께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여유진, 어유경, 황남희, 우선희, 2021, p. 13).

-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14위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엔 세계행복지수(World Happiness Index)는 세계 150여 개 나라 중 50~60위권에 머물고 있음.
- ‘성공의 실패’라 할 만한 이 같은 복합적 역동성은 무엇에서 기인하며 어디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
  - 이 글에서는 그 단초를 생애주기별 ‘불평등’(inequality)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불안정성’(insecurity)에서 찾아보고자 함.
  - 불평등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가 불평등 추이와 거의 궤를 같이하고 출산율 추이는 불평등 추이와 역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재생산 및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그림 1).

[그림 1] 불평등도(지니계수)와 자살률, 합계출산율의 추이



자료: 불평등도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3)(2021. 6. 24. 인출); 자살률은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5091&stts\\_cd=509101](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5091&stts_cd=509101)(2021. 8. 27. 인출); 합계출산율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2021. 6. 24. 인출).

#### ◆ 주요 내용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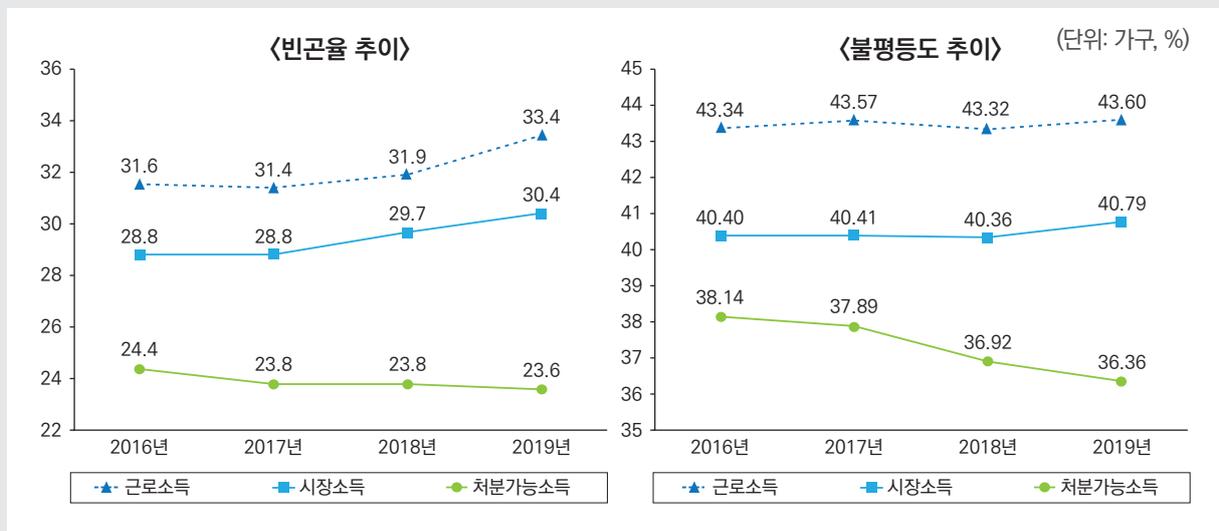
- 이에 이 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함.
-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임.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기준 시점은 조사 시점의 전년도(2011~2019년), 재산 기준은 조사 당해 연도(2012~2020년)임.
  -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는 2020년 10월과 11월에 실시되었으며, 전국 4,991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 분석에 활용한 소득은 1인 균등화된 소득이며, 재산은 균등화되지 않은 가구 순재산임.
  - 빈곤율은 중위 50%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불평등도에는 지니계수를 활용함.

## 02. 빈곤과 불평등의 최근 추이와 특성

- ◆ 첫째, 최근 들어 근로소득·시장소득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상승 추세이나 공적 지출과 공적 이전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근로소득·시장소득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최종적인 처분가능소득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감소 추세임. 즉,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공적 지출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이전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함(그림 2).
    - 특히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공적 개입으로 인한 불평등(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소득 유형별 가구 빈곤율(왼쪽)과 불평등도(지니계수)(오른쪽)의 최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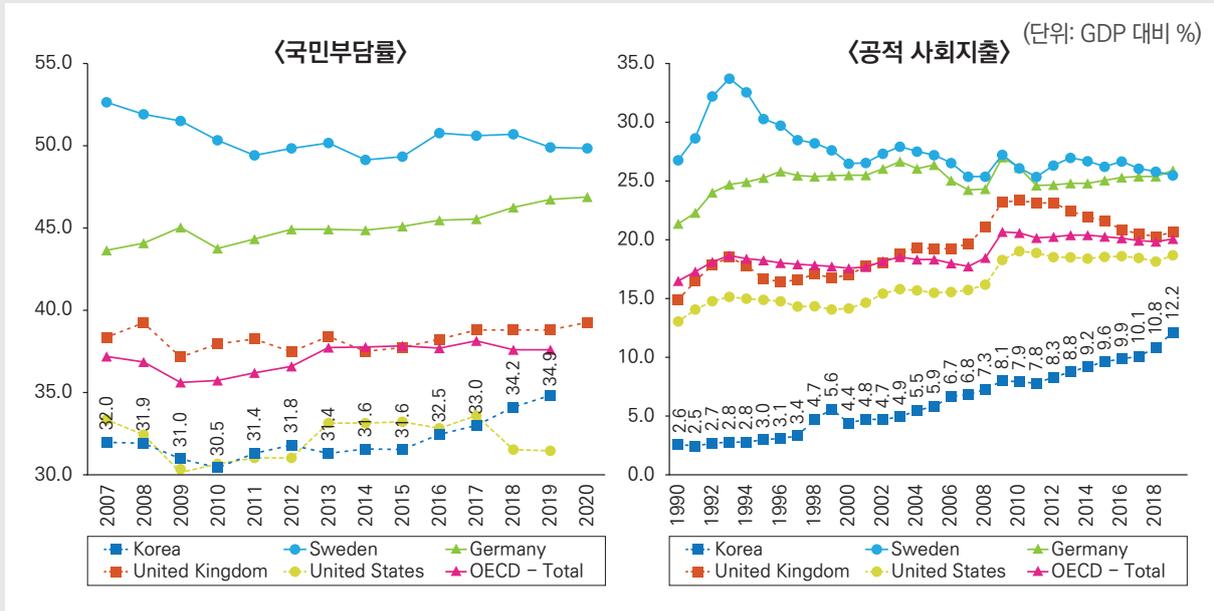


주: 빈곤선은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으로 고정된 값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실제로 2019년에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34.9%로 2017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크게 앞섬(그림 3).
  -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12.2%로, 여전히 OECD 평균(20.0%)에는 못 미치지만 추격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7~2019년 사이 한국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2.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재분배에 적극적인 접근을 취한 결과로 추정됨.

[그림 3] 주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왼쪽)과 공적 사회지출(오른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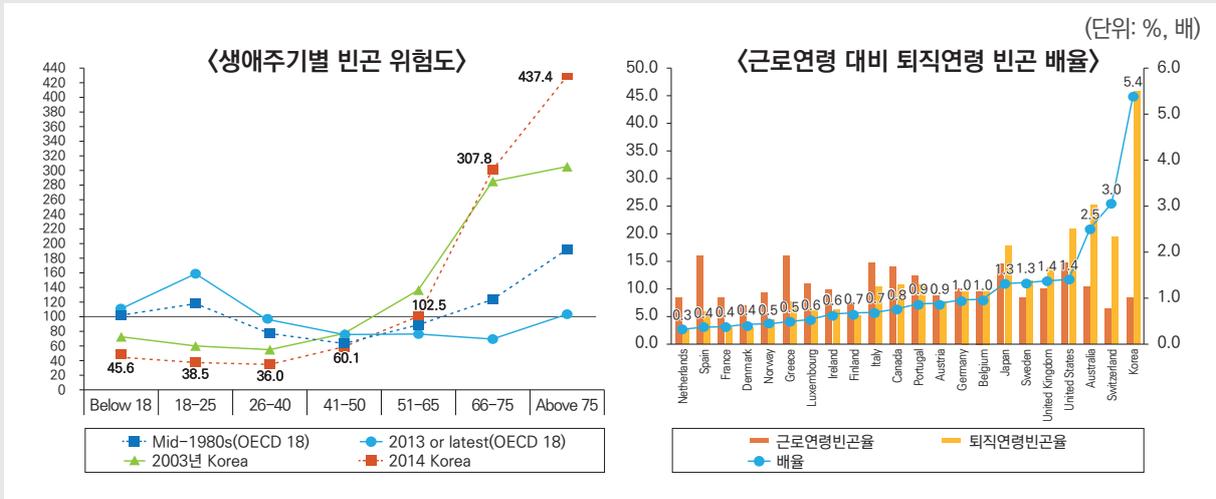
자료: OECD.stat에서 2021. 8. 28. 인출 후 그림 작성.

◆ 둘째,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는 우리나라 빈곤 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임.

- 생애주기별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의 두드러진 특징은 노년기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임.
  -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연도와 사용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4~15년 한국 노인의 빈곤 위험도는 전체 인구 빈곤 위험도의 4.37배, 근로연령 대비로는 5.4배 더 높게 나타남(그림 4).
  - 2010년대 초중반 OECD 국가들의 빈곤 위험도가 생애주기별로 비교적 평탄한 것과 대조적임. 또한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의 유럽대륙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근로연령 빈곤율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과는 극히 대조를 이루는 결과임(오른쪽 그림).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이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지출은 GDP 대비 2.7%로 OECD 회원국 평균(7.4%)의 36.5%에 불과함.<sup>3)</sup>

3) OECD.stat(2021. 8. 2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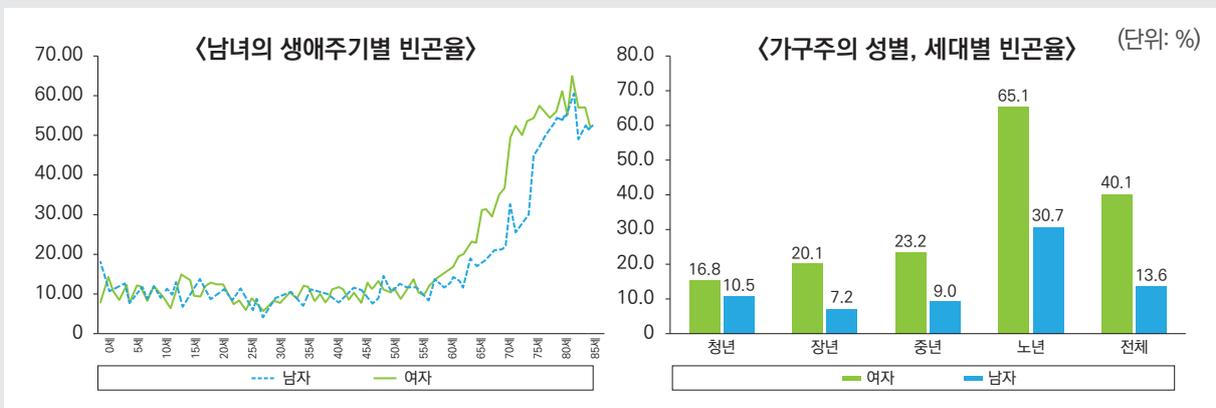
[그림 4] 생애주기별 빈곤 위험도(왼쪽)와 근로연령 대비 퇴직연령의 빈곤 배율(오른쪽)



주: 왼쪽의 빈곤 위험도는 전체 인구 빈곤율을 100으로 둘 때 연령대별 빈곤율을 배율의 퍼센티지로 나타낸 값임.  
 자료: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4호, pp.2~3.

- 빈곤의 '노인화'는 빈곤의 '여성화'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그림 5).
  - [그림 5]의 왼쪽 그림은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빈곤율을 보여 주는데, 대체로 생애 후반기 빈곤율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년기에 빈곤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가구의 성별·세대별 빈곤율을 보아도(오른쪽 그림), 생애 전반에 걸쳐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보다 거의 3배까지 높음. 특히 노년기에 이르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65.1%로 약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빈곤 상태에 놓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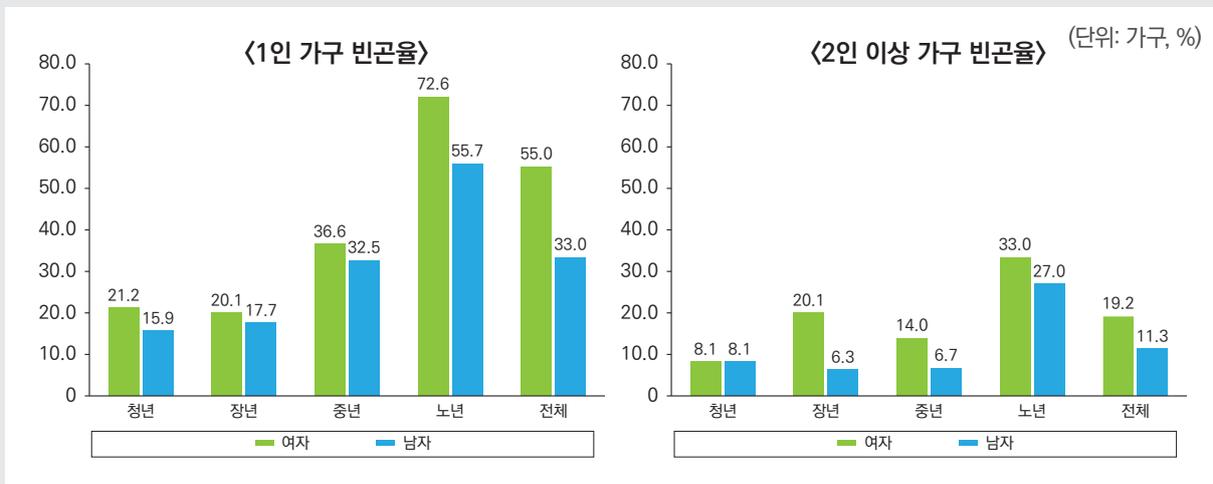
[그림 5] 남녀의 생애주기별 빈곤율(인구 단위, 왼쪽)과 가구의 성별·세대별 빈곤율(가구 단위, 오른쪽)(2019년)



주: 가구주 연령에 따라 청년(18~34세), 장년(35~49세), 중년(50~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나누어 가구주 성별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여성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72.6%로 거의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빈곤할 정도로 높은 빈곤율을 보임(그림 6).
  - 반면, 청장년과 중년 단독 가구는 비록 남성 단독 가구에 비해 여성 단독 가구의 빈곤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청년과 노인의 남녀 가구주 가구 간 빈곤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중장년 가구는 남녀 가구주 가구 간 빈곤율 격차가 큼.
  - 생애주기별로 남녀 간 빈곤율 격차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함을 시사함.

〈그림 6〉 1인 가구(왼쪽)와 2인 이상 가구(오른쪽)의 성별·세대별 빈곤율(가구 단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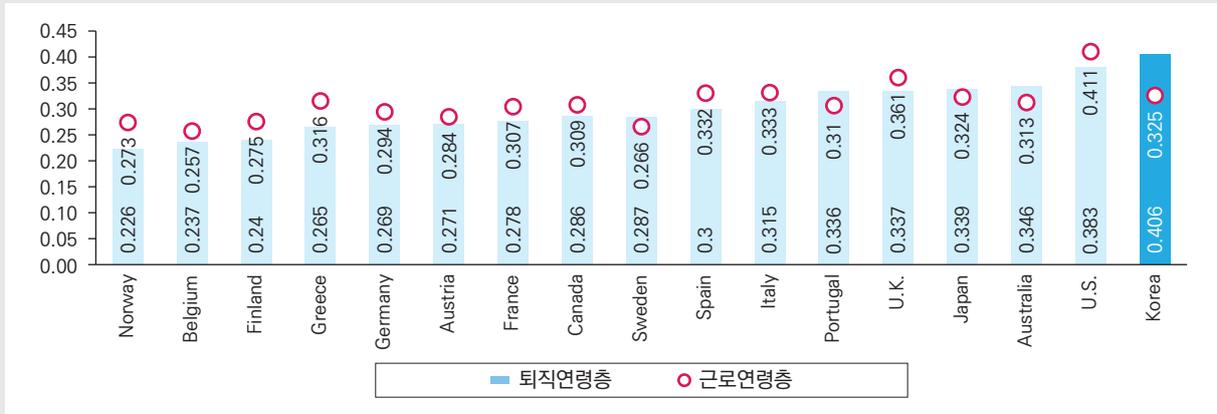


주: 가구주 연령에 따라 청년(18~34세), 장년(35~49세), 중년(50~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셋째,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누적적으로 증가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은 생애 후반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초기 재산에 더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 즉 순저축액이 많고, 자산 투자를 통한 증식 가능성도 평균적으로 더 높기 때문임.
  - 하지만 소득의 경우, 선진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유럽대륙 국가에서 노후소득의 불평등도는 근로연령기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그림 7).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보편적이면서도 재분배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임.
    - 퇴직연령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근로연령층의 그것보다 더 높은 나라는 스웨덴, 포르투갈, 일본, 호주, 한국 등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다수 국가는 그 반대임.
    -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불평등(0.406)이 근로연령기 소득 불평등(0.32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계층 간, 성별 격차가 크고 노후 근로활동 여부에 따른 편차도 크기 때문으로 추정됨.

[그림 7] 주요 OECD 국가들의 근로연령기와 노령기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 2018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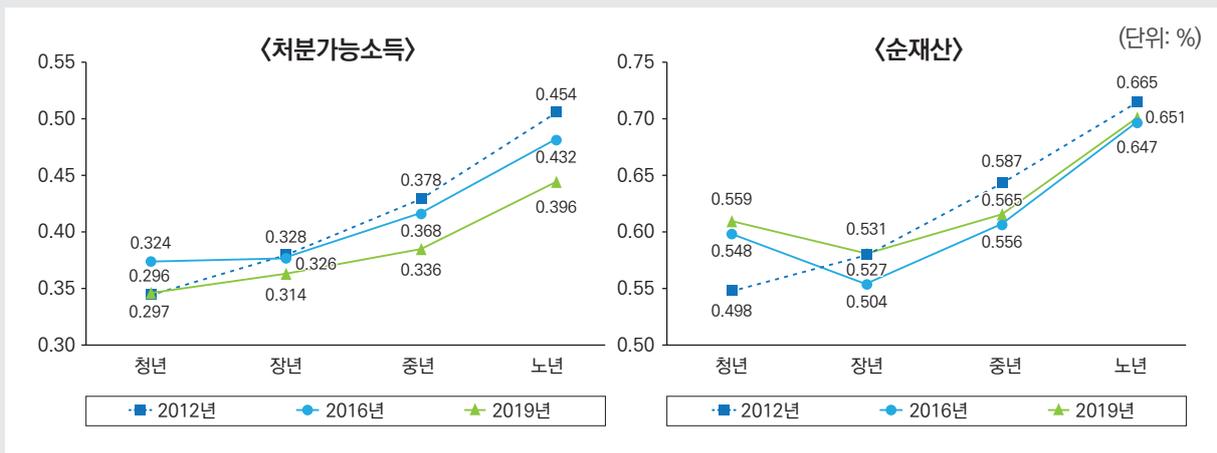


주: 미국은 2017년 자료임.

자료: OECD.stat에서 2021. 8. 28. 인출 후 그림 작성.

- 우리나라의 경우 처분가능소득과 순재산 모두 대체로 생애 후반부, 특히 노년기에 불평등이 크게 확대됨(그림 8).
  -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처분가능소득이 최근(2019년)으로 올수록 전체적으로 불평등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임.

[그림 8] 생애주기별 처분가능소득(왼쪽<sup>4)</sup>)과 순재산(오른쪽) 불평등도 변화(지니계수, 가구 단위)



주: 1)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소득이며, 순재산은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 재산임.

2) 가구주 연령에 따라 청년(18~34세), 장년(35~49세), 중년(50~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4) 소득은 2016년 이후 행정 자료 보완 방식으로 조사 방식이 변경됨으로써 2012년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순자산 추이와의 일치성을 위해 2012년 자료를 제시하였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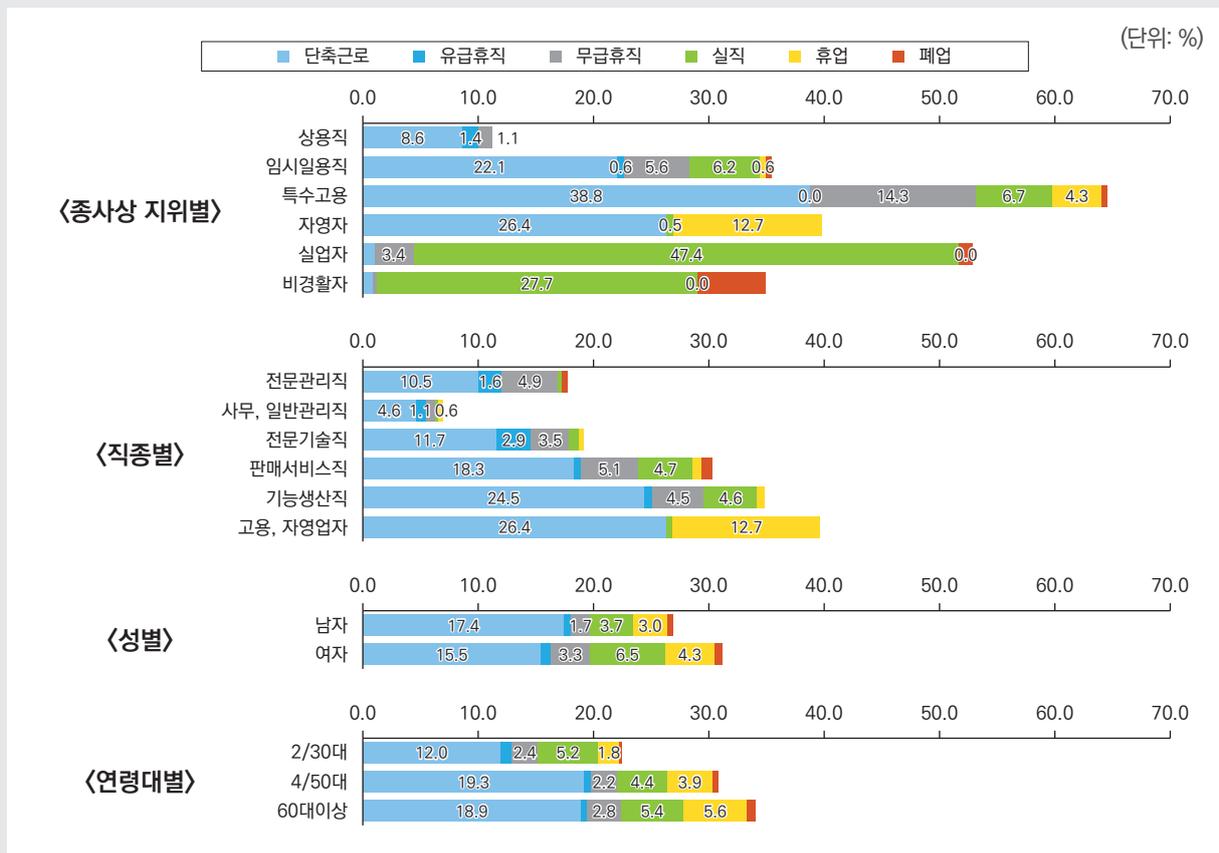
- 재산의 경우 2012년에 비해서는 불평등도가 다소 떨어졌으나 2016년에 비해서는 상승함. 특히 청장년층의 자산 불평등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

-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피케티의 '상속자본' 논의의 맥락과 무관치 않을 뿐 아니라, 출발선상에서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은 사회이동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징후라는 점에서 향후 그 추이를 주시해야 함(Piketty, 2019).

◆ 넷째, 코로나19 장기화로 K자형 양극화<sup>5)</sup>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경제활동 상태별로 볼 때,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은 각각 6.2%, 6.7%가 2020년 1~9월 사이에 실직을 경험했으며, 특고의 64.8%는 어떤 형태로든 근로활동 위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9).

[그림 9] 개인 특성별 2020년 1~9월 중 코로나19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경험률



주: 1) 분모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의 총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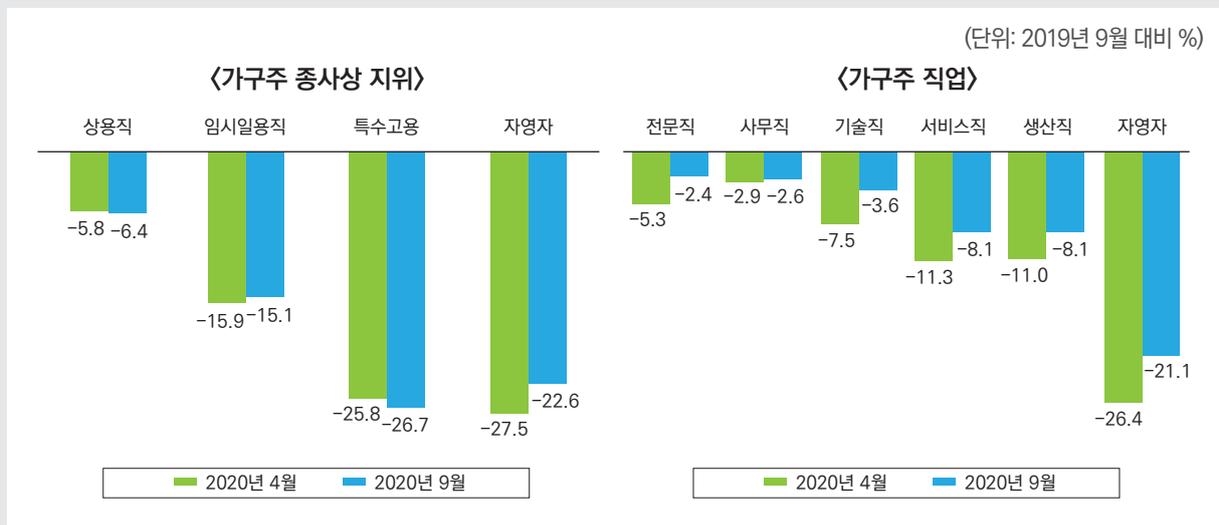
2) 임시·일용근로자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등을 포함함. 자영업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자료: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민, 김상현...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그림 5-7>.

5) 기존의 코로나19 극복 시나리오가 총량적인 수준에서 'V자형', 'U자형', 'W자형', 'L자형'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면, 'K자형'은 구조적 양극화의 확대를 의미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K자형 회복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각 영역에서 빠른 회복과 상승세를 보이는 영역(디지털산업, 전문기술직, 주주와 임대인 등)과 지속적인 정체 혹은 미미한 회복세(기존 제조업, 단순노무직과 영세자영업자, 임차인 등)를 보이는 영역 간의 파편화와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형태의 경제 회복 가설이다. 양극화 논의 그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양극화의 '촉매제' 내지 '가속페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여유진, 2021).

- 자영자의 26.4%는 단축근로, 12.7%는 휴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40%가 근로활동에 피해를 입음. 이에 비해 상용직 중 실직자는 거의 없었으며, 근로활동의 변화가 있더라도 주로 단축근로(8.6%), 유급휴직(1.4%) 등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크지 않은 형태임.
- 성별로는 여성(31.1%)이 남성(26.8%)에 비해 근로활동 변화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을 뿐 아니라 실직(6.5%) 등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큰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 단위로 볼 때도 가구주가 상용직보다는 자영자, 특수고용,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함(그림 10).

[그림 10] 가구주 특성별 가구 총소득 증감률



주: 1) 총소득은 균등화하지 않은 소득이며, 가구 단위로 계산됨.  
 2)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외된 값임.

자료: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그림 5-12> 중 일부.

- <표 1>과 <표 2>는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빈곤율과 불평등도 변화를 보여 줌.
-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크게 상승함.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를 둔 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핵심 연령대(4, 50대) 가구주를 둔 가구들 간의 불평등도가 더 크게 상승함.

〈표 1〉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율 변화(인구 단위)

(단위: %, %p.)

구분	항목	2019년 9월(A)	2020년 4월(B)	2020년 9월(C)	증감 1(B-A)	증감 2(C-B)
가구주 종사상 지위 (2020년 9월 기준)	상용직	1.4	1.2	1.3	-0.2	0.1
	임시·일용직	13.7	18.1	13.9	4.4	-4.2
	특수고용	5.2	19.6	20.5	14.4	0.8
	자영자	7.1	20.6	15.7	13.5	-4.9
	실업자	8.2	15.5	50.3	7.3	34.8
	비경활자	39.8	40.3	41.9	0.5	1.6
전체		12.0	16.4	15.6	4.4	-0.8

주: 빈곤선은 1인 균등화된 가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값임. 인구 빈곤율임.

자료: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표 5-27> 중 일부.

- 전체적으로 빈곤율은 1차 대유행 직후(2020년 4월) 기준으로 그 이전(2019년 9월)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한 16.4%,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0335 증가한 0.3159를 기록함.

〈표 2〉 가구(주) 연령대별 불평등도 변화(지니계수, 인구 단위)

구분	항목	2019년 9월(A)	2020년 4월(B)	2020년 9월(C)	증감 1(B-A)	증감 2(C-B)
가구주 연령대	2, 30대	0.2258	0.2571	0.2532	0.0313	-0.0039
	4, 50대	0.2836	0.3188	0.3128	0.0353	-0.0061
	60대 이상	0.3142	0.3417	0.3291	0.0275	-0.0126
전체		0.2824	0.3159	0.3083	0.0335	-0.0076

자료: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표 5-28>.

### 03. 나가며

- ◆ 빈곤과 불평등의 세대별·성별 분포 측면에서 볼 때 노인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체계의 취약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는 비정형 근로자와 자영자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커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sup>6)</sup>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애초에 공적 연금의 대상 바깥에 있음.<sup>7)</sup> 이로 인해 특히 현세대 고령·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6)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3.17%는 장기체납자, 11.81%는 납부예외자, 0.73%는 공적 연금 비적용자로 분류되며, 28.48%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다. 18-59세 총인구 가운데 44.19%(1442만 1000명)는 일정 시점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인구집단이다(여유진, 2019).

7) 2017년 기준으로 15~64세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은 59%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가장 높은 나라인 스웨덴(85.7%)과는 26.7%포인트 격차가 난다(여유진, 2019).

- 공적 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 증액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음. 향후에도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 청장년 가구주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유형과 근로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요구됨.
- 향후 홀벌이가 불가피한 비혼 한부모가구와 맞벌이가구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이상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임.
  - 다양한 가구 유형, 근로 형태와 그러한 가구에서 자라는 아동을 배려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가 구상될 필요가 있음.
- ◆ 자산 불평등 증가는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효과의 사회복지적 영향과 대응책을 고심하여야 함.
-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나라일수록 노후 ‘안정(security)의 대체재’로서 자산 축적에 몰두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노동시장, 노후, 주택 불평등과 불안정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 이 중 자산 불평등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주택 불평등 문제는 청년의 좌절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세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
    - 노후소득보장이 복지국가의 세대 간 연대와 암묵적 계약을 전제로 한다면, 이에 대한 동의는 청장년 세대의 안정성 보장을 기반으로 함. 주택 자산이 급등해 사실상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면 이를 담보로 한 노인 세대의 안정 추구도 신기루에 지나지 않음.
  - 노후의 ‘소득’ 안정과 청장년기의 ‘자산(주택)’ 안정 강화는 세대 간 연대를 위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과제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19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사후적인 통합적·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클라우드 슈바프는 코로나19를 어디서나 소득, 재산, 기회의 차이를 더 심화시킨 ‘위대한 불평등주의자’로 묘사함.
    - 상위층과 중산층은 집에서 재택근무와 자율학습이 가능하지만,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 계층은 집에 머물 수도, 자녀 교육을 감독할 수도 없다는 것임. 이는 범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가족과의 유대감이나 사회적 유대감이 약한 나라에서 이러한 이분법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함(Schwab and Malleret, 2020).

- 앞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산업과 일터는 나름의 자구책을 찾아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자영업은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의 구직 기간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음.
  - 위기의 사회적 영향은 경제 지표에 비해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영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회복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건·복지 Issue&Focus, 364, 1-8.
- 여유진. (2021). Post 코로나 시대 신앙극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vol.90(2021년 7월호), 30~34, 기획재정부.
- 여유진. (2021). 생애주기별 불평등구조를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2021년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정책연구원 학술대회(포용사회와 여성노동의 미래: 여성노동의 취약성 담론, 이해, 해소, 2021. 9. 9.).
- 여유진, 어유경, 황남희, 우선희. (2021).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 과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 Piketty, T.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원서출판 2019).
- Schwab, K. & Malleret, T. (2021). 클라우드 슈밥의 위대한 리셋. (이진원, 옮김). 메가스터디북스. (원서출판 2020).
- OECD.stat
- 불평등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3) (2021. 6. 24. 인출)
- 자살률: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5091&stts\\_cd=509101](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5091&stts_cd=509101) (2021. 8. 27. 인출)
-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21. 6. 24. 인출).
- 통계청. (2012~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원자료.

집필: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선임연구위원) 문의: 044-287-8181